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2015.01.08 | 정태인_새사연 선임연구위원 | ctain60@gmail.com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경기전망 :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자료” 까지 200쪽이 넘는 문서를 발표했다.

표1. 한국 경제 전망

	'13년 실적	'14년 실적 (4/4분기 전망 포함)		'15년 (전망)	
		정부	KDI	정부	KDI
실질 GDP	3.0	3.4	3.4	3.8	3.5
민간소비	2.0	1.7	1.7	3.0	2.3
설비투자	△1.5	5.3	4.7	5.8	3.3
건설투자	6.7	3.2	2.7	5.2	4.7
지식재생산물투자	7.3	6.1	6.0	7.1	6.7
수출(통관, %)	2.1	2.7	3.2	3.7	3.6
수입(통관, %)	△0.8	2.5	2.5	3.2	3.8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2014. 12 KDI,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4. 12

정부는 2015년에 3.8%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의 예측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따져 보기 전에 2014년의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자. 표1.에서 보듯이 2013년 말에는 3.9%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그리고 2014 예산은 4.0%에 맞춰서 짰다).

4/4분기의 전망을 포함한 2014년 실적치는 3.4%다(표1. 0.5%p의 차이는 주로 민간 소비에 대한 과도한 기대(3.3→1.7)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민간 소비가 GDP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1.6%의 차이는 GDP에서 약 0.8% 감소를 가져 온다.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망보다 약간 더 높아서 현재의 결과 나타난 것이다.

표2. 한국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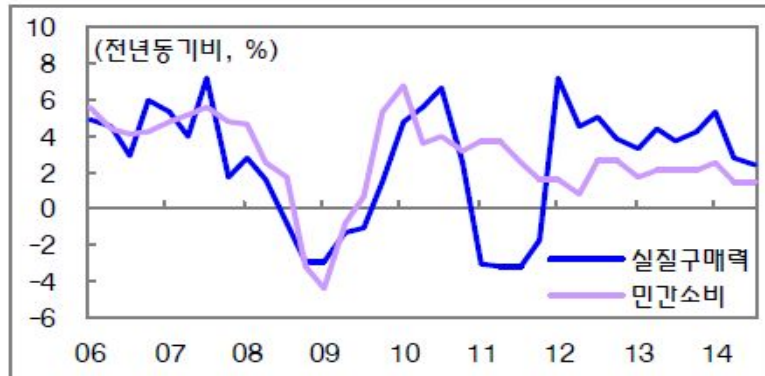
	'14년 전망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1)	3.6
Dubai 유가(\$/bbl)	103
실질 GDP	3.9
민간소비	3.3
설비투자	3.3
건설투자	2.0
수출(통관, %)	6.4
수입(통관, %)	9.0

출처 : 기획재정부, 2014년 경제전망, 2013.12.27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민간소비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정부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고, 따라서 긴축 정책을 제시했던 KDI가 이번에는 정부나 한은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다(표1.). 정부와 KDI 전망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소비인데(정부는 3.0%, KDI는 2.3%), 이 0.7p%의 차이가 둘 간의 성장률 전망의 격차를 거의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나는 KDI의 수치도 상당히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양호한 고용증가세, 임금, 소득개선, 복지예산 증액, 가계소득 증대세제, 가계흑자율 등을 소비 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증가의 유력한 증거로 든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가계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012년 이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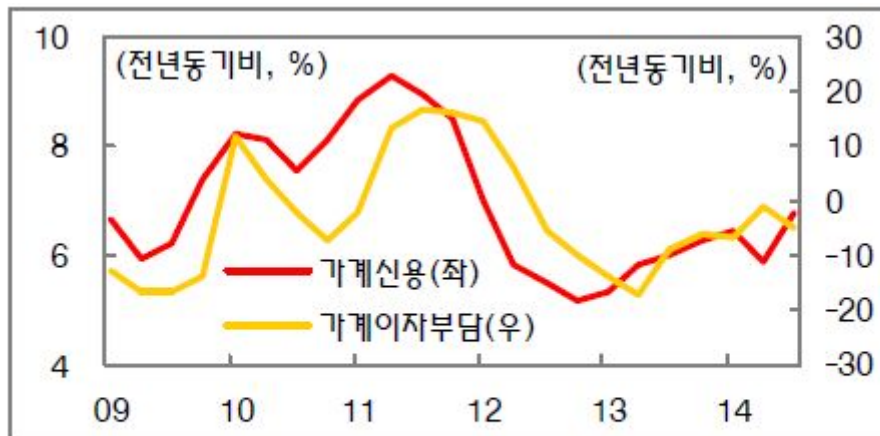
그림1. 가계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



* 주: 실질구매력 = 실질임금 × 취업자수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p43

고용율이 증가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이 감소한 것은 주로 50세 이상의 노년층과 파트타임 여성의 고용이 증가해서 1인당 실질임금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계부채의 양이 이미 한계상태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소비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역시 정부의 “전망” 에서 따온 <그림2>는 LTV¹⁾, DTI²⁾ 규제완화 이후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으며(가계신용), 동시에 이자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2. 가계신용과 이자부담



* 주: 가계 이자부담 = 가계대출 × 가계대출금리
 ** 자료: 한국은행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2014, p44

- 1) Loan To Value ratio.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 2)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증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배당소득 증대도 민간 소비의 증가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혜택은 주로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민간소비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수출과 투자에 비해서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급증이나 급감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얘기다. 그림1.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민간 소비는 2010년 이래 계속 하락세이다. 따라서 금년도 민간소비가 1.5% 이상이면 다행일 것이다.

수출과 투자

수출과 투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하고 특히 수출은 기본적으로 해외 수요에 의존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1장에서 본 바대로 세계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오로지 미국만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낙관할 수 없는데 첫째는 미국의 성장이 양적완화와 달러화 환류 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 반등은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급반전할 수 있다. IMF보고서가 이력 현상³⁾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는 현재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상위 10%에게 귀속되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리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셋째,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 미국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화를 꾀하는 산업구조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3.에서 보듯이 2014년 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0년대 초반 50%에서 최근 30%까지 낮아지고, 전기전자 등에서 생산력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LGE 리포트, p18).

3) hysteresis,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과거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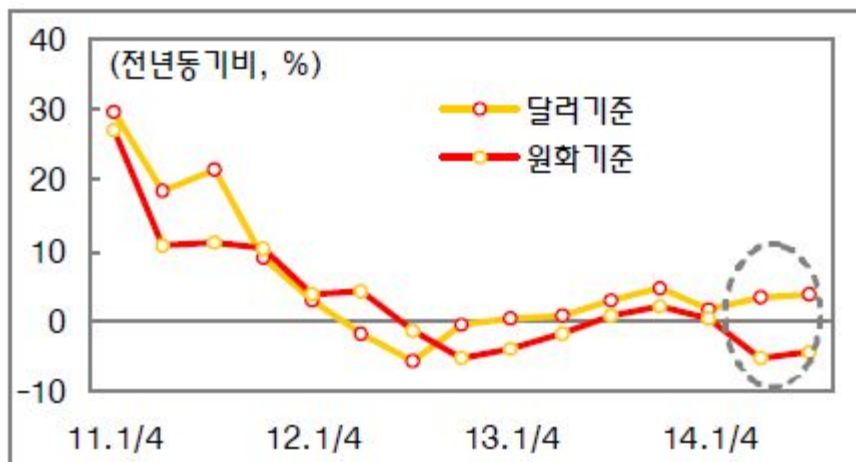
그림3. 중국수출과 대중수출의 이원화



출처 : LGERI 리포트,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 2014.9, p18.

수출 부문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원화표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그림4. 달러기준 수출과 원화기준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무역협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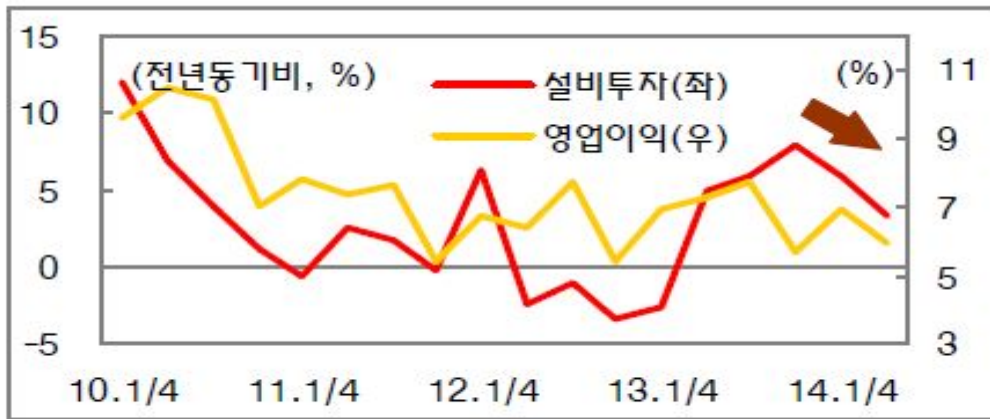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2014, p22

그림4.는 달러 기준 수출 증가율이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화기준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수출기업이 원화절상

의 충격을 달러화 가격 인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원화가 10% 절상되었을 때, 미국에서 달러가격을 10% 높여도 예전처럼 판매된다면 원화기준 수출은 변함이 없지만 현재의 경쟁력으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5년에는 달러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 현상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화기준 수출의 감소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림5. 참조).

그림5. 기업의 영업이익과 설비투자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Fn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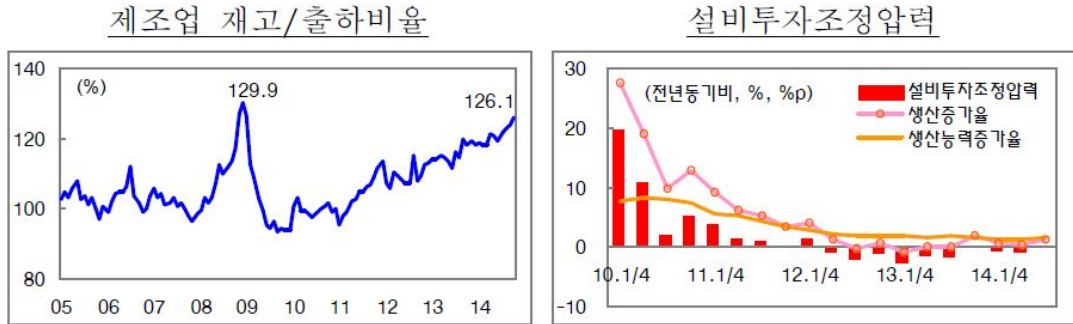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2014, P42

뿐만 아니라 2010년 이래 제조업의 재고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팔리지 않아서 쌓아둔 제품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조정압력은 거의 없다(그림6. 참조). 따라서 설비투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 기업들이 연초의 계획에 비해 투자 실적이 4% 가량 적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의 경제성장율은,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⁴⁾가 현실화하지 않는다 해도 3%를 넘기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부문(GDP의 약 15% 차지)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서 3%를 약간 넘기는 수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은행이 개발한 금융불안지수로 금융위기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짐. 기존의 금융불안지수인 조기경보지표(EWI)나 금융리스크의 정도를 나타내는 FSI(금융스트레스지수)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가격변수의 상하 양방향의 변동성보다는 하방리스크만을 별도로 측정해 만든 표.

그림6. 제조업 재고/출하비율과 설비투자조정압력



* 자료: 통계청

* 자료: 통계청

출처 :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2014, p45

정부 정책

가. 경기대책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은 구조개혁(“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경기대책(“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협요인 사전 제거), 그리고 부록처럼 붙은 남북정책(“남북 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때와 달리 구조개혁을 첫 번째로 내세운 점은 경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경기대책부터 보면 “시중에 떠도는 돈을 투자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가득 차 있다. 예의 규제완화 만으로는 부족하니 수익성까지 보장해 주자는 게 금년 정책의 요지다. 즉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정책”(관계부처, p4)가 정부 성장정책의 핵심이다. 아예 한 항목으로 독립한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택지 인센티브,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열 가지 이상의 정책수단이 동원됐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적극 활용하고 용지공급 조건을 완화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 임대 주택사업에 뛰어 든다면 땅을 얼마든지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 공급 등 작년의 건설규제 완화에서 한발 더 나아갔으며 기업형 임대주택 관리업의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금융 면에서는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동원 금융지원, 리츠(주택관련 민간투자 펀드) 상장요건 및 출자한도 완화, 리츠와 펀드간의 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고, 세제 면에서는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하며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도 높여 줄 작정이다.

이외에도 공급확대와 짝을 이루는 수요기반 확충 정책이 제시됐고 이 모두를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도면 가히 종합선물세트라고 할만하다.

토목건설에도 민간자본을 끌어 들일 계획이다. 민자사업 대상에 도시재생 기반 시설을 포함하고(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⁵⁾에 더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⁶⁾을 도입해서 철도, 경전철, 항만, 환경시설 건설에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후 이 방식을 의료, 보육, 노인요양 시설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사회서비스사업에도 건설업자를 끌어들일겠다는 얘기다. “돈 많은 사람들이여, 한 몫 챙겨줄 테니 건설에 뛰어들라” 이것이 정부의 경기대책이다.

설비투자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해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⁷⁾ 즉 설비투자 분야에서도 위험과 개별기업 부담을 덜어 줘서 대형 투자프로젝트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초기의 위험이 크거나 양의 외부효과가 큰 사업은 정부가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산업의 성숙도와 같은 여러 조건과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면 바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20조원 규모의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 가동” 이 바로 그렇다. 결국 혜택은 대기업이 누릴 것이다.

이런 대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구조개혁 항목에 집어넣은 것 (“금융 역동성 제고”)도 흥미로운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자취를 감추었던

- 5)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탁한 사업을 일정 기간동안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서 수익을 직접 거두게 된다.
- 6) BOA, Build Operation Adjust.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 7) 정부가 현물출자를 포함해서 산업은행 자본금을 2조원 이상 보강해 줘서 15조원 이상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거의 메가뱅크, 투자은행 육성, 사모펀드 육성이 다시 등장했다. 거시 건전성 규제가 절실한 시점에 ‘금융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가 부활한 것(“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다.

나. 리스크 관리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요소가 많고, 특히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라는 이름으로 가계부채 대책(“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 구조조정(“선제적이고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대응(“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안전판 마련”)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과 상호금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빼곤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당시 ‘행복기금’에 의한 적극적 가계부채 축소를 약속한 것에서 거리가 멀다.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부채의 유동화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이 방식은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역시 한계기업에 대한 긴급 조치를 빼곤 금융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업재무안정 PEF⁸⁾ 활성화”와 “M&A 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이 그것이다.

자본유출 대응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신현송 당시 국제경제보좌관(현재 프린스턴대 교수)이 주도한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과세)”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완화장치를 탄력 운용”이라는 명목으로 3종 세트를 무력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 유일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규제” 역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암덩어리’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자본유출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거시건전성규제를 완화한다면 장차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8) 사모투자펀드.

리스크관리는 시의 적절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신현송 당시 국제경제보좌관이 마련한 특제 무기,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를 무력화할 기미가 보이는 것이 걱정이다.

다. 구조개혁

진정한 문제는 구조개혁에 있다. 나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현재의 노동문제를 풀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교육개혁은 더욱 더 절실하다. 현재의 구조가 자아내는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이란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지 않고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가장 성공한 구조개혁을 꼽는다면 단연 전후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복지국가체제일 것이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농지개혁이 바로 그런 구조개혁이었다. 과거의 질서인 지주제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구조개혁의 대상은 1994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 이래 외환위기와 한미 FTA, 그리고 두 보수정부 하에서 강행된 시장만능의 제도와 관행일 테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금융부문, 그리고 노동과 교육부문 개혁은 과거의 개혁 방향,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줄푸세’를 답습하고 있다. 시장과 경쟁의 요소를 더 많이 도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바로 현재 위기의 원인인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개혁을 단기에 군사작전처럼 해치우려 하고 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대중과 언론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포퓰리스트 쿠데타이다. 이번 정책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적’은 대기업과 공무원의 노조이다.

구조개혁이란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에 관련 이해당사자의 손익이 엇갈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성공하려면 고도의 정치과정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성공한 구조개혁으로 든 최근의 사례를 봐도, 예컨대 독일의 하르츠개혁, 핀란드의 교육개혁, 영국의 연금개혁 모두 하나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본가 대표가 개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사례가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즉 기득권 계급이 솔선수범해서 개혁 비용을 가장 많이 분담할 때, 그리고 정부가 불편부당한 태도를 취할 때(스웨덴의 정치학자 로스슈타인은 정부의 질이 복지국가 성공의 제1

의 요소라고 단언한다) 비로소 구조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정부가 구조개혁 성공의 사례로 든 영국의 금융 ‘빅뱅’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예외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금융중심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행한 금융빅뱅이 영국의 산업과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기준에 비춰 볼 때 성공인지, 한국에서 가능한 모델인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해도 개혁의 방법에 관해서 또 한번 백가쟁명일 테다. 예컨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연금”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지속가능한 노후 복지를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특혜’를 부각시켜 공무원 연금을 깎고, 다음에는 군인과 사학연금을 건드리고, 다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식은 끝없는 갈등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총체적 그림 없이 노동문제와 교육문제만 따로 떼어 해결할 수는 없다. 예컨대 만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다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가 해고에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이며, 그런 격차의 대부분이 불공정한 하청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실업보험의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노동시장개혁의 전제조건이다. 핀란드의 교육개혁은 이제 5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개혁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저런 술한 이견을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 없이, 신종 쿠데타를 동원해서 그저 ‘줄푸세’를 실행하려 한다면 이 정권은 집권 3년차에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엉터리 경제전망, 투기적 경기대책에 따른 경제위기와 더불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2015년 한국경제는 지난 6년 간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4년 1/4분기 전년 동기대비(즉 2013년 1/4분기 대비) 3.9%, 2/4분기 3.5%, 3/4분기 3.2%의 흐름은 4/4분기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한은과 정부가 2014년 전체로 2013년에 비해 3.4%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은 4/4분기가 2%대 성장을 했으리라는 걸 의미한다.

물론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건설과 관련된 정책을 성공시킨다면 3.5% 언저리

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산시장에 거품을 일으키는 성장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건 우리의 과거에서도, 또 지금 미국 경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가 여의치 않으면 ‘구조개혁’ 이라는 이름으로 가상의 적을 공격하는 ‘개혁’ 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과 대기업의 정리해고 자유가 타겟이 될텐데 이는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사회적 합의 없는 구조개혁과 투기조장에 의한 경기회복은 매우 위험한 조합이다. 혹여 성공한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클 것이다. 📌

2015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8일	한국경제(1)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1월 12일	세계경제	추후 공개	박형준
1월 15일	한국경제(2)	추후 공개	이상동
1월 19일	노동·고용	추후 공개	김수현
1월 22일	주거정책	추후 공개	강세진
1월 26일	복지정책	추후 공개	이은경
1월 29일	돌봄정책	추후 공개	최정은
2월 2일	종합	추후 공개	새사연